

국가 경쟁력 강화 대책안 뭘 담았나

기업인 양벌규정 철폐... 처벌은 과태료 위주

대부업체 이용자도 지원 대상에

외환규제 풀고 기업공시 부담 줄여

■ 신불자 구제 어떻게

지금까지 채무조정 대상에서 소외됐던 대부업체 이용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대부업체 이용자가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로 갈아타는 환승론에 대해서도 정부가 신용보증을 제공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10조원으로 추정되는 대부업체 대출액을 감안할 때 기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총 7천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신용회복기금은 각 금융회사로부터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연체 채권을 매입하기 위한 재원이 된다.

우선 기존 신용회복 프로그램에서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연체액만 대상이 됐지만 신용회복기금은 대부업체 이용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3천만원 이하, 3개월 이상 연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원 대상자들은 이자가 면제된 상태에서 최대 8년간 원금을 나눠 갚으면 된다.

문제는 민간은행이 배분금을 출연하는 데 있어 강제성이 없어 이들 금융회사가 얼마나 출연할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신용회복기금의 지원 대상은 연체액이 3천만원 이하인 신용불량자 72만명이다. 금융위는 이들에 대해 원금 탕감을 없이 이자만 감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체 기록에 대해서는 일단 '신용회복지원중'으로 등록하되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에 한해 기록을 삭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용회복 방안 역시 어렵게 채무를 상환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특히 연체기록을 말소하는 방안의 경우 '실질 상환'이라는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 금융상품 다양화

금융위원회가 24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한 금융 영업 규제 선진화 방안은 새로운 금융상품의 도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식매수청구권을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 전까지 주식을 취득한 주주에게만 부여하는 등 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은행들이 현행 자산유동화법을 활용해 구조화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금융 당국이 지원하게 된다. 발행 전에 법에 부합하는지, 시장에서 원활히 유통될 수 있는지 등을 업계와 금융 당국이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외환 규제는 대폭 완화된다. 외국환 법령을 위반할 때 거래정지 위주로 이뤄지는 행정 처분을 과태료 방식으로 전환한다. 거래정지가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너무 큰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또 위반 사실이 발견돼도 제재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거래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지금은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제재가 끝날 때까지 거래가 아예 금지된다.

외환 거래의 종류를 규정하고 거래 종류에 관계 없이 소액인 경우는 안전 자유화되며 특히 은행을 통해 송금할 경우 서류 증빙 없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을 상향(현재는 연간 5만달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기업의 공시 부담도 덜어준다. 전체 상장법인 중 상위 10%는 '잘 알려진 기업'으로 지정돼 공시 의무가 완화된다. 증자할 때마다 신고서를 내는 등 불필요한 공시를 반복하는 일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금융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판매업자가 지켜야할 일반 원칙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판매 과정에서 설명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회사와 임직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들쭉날쭉 업무정지 기준 통일

■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법제처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

법제처는 우선 법령별로 행정처분의 가중·감경 기준이 달라 기업들이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있는 만큼 결혼중개업 관리법 시행규칙,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등 147개 법령을 대상으로 업무정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가중·감경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법령마다 가중처벌을 위한 기간산정 기준이 1~5년으로 다양한 만큼 방문판매법 시행령,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등 27개 법령을 대상으로 가중처벌 기간산정과 관련, 통일적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법제처는 같은 시기에 2건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골재취법 시행령 등 81개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곧바로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하는 대신 경고나 시정명령으로 먼저 자발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때에도 위반행위 시정시까지만 영업정지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제처는 변경신고, 지정·허가·등록기준 위반, 명의대여, 일괄하도급 등 15개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 법령마다 제재 수준이 달라서 행정 신뢰도가 저하되고 업종 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유사한 위반에 대해선 유사한 종류의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전과자 年 10만명 줄인다

■ 행정형벌 합리화

법무부가 24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한 '행정형벌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종업원 과실에 대해 자동적으로 기업주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대폭 뜯어고쳐진다.

종업원의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관리·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개인 영업주에 대한 형사책임이 면제된다.

법무부는 기업과 영업주의 '책임주의'를 명확히 하는 쪽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등 392개 법률을 개정하고 관세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등 15개 법률에 규정된 징역형을 폐지한다.

이를 통해 법인의 벌금 부담이 약 170억원 가량 줄어들고 작년 기준 6천277명의 전과자가 생기기 않는 등 약 1천610억원의 사회적 비

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규제안은 총 151건으로 이 가운데 84건은 벌금과 동일한 액수의 과태료로 전환된다. 운전면허증 휴대·제시 의무 위반 등 시대에 맞지 않는 11건의 규제는 완전 삭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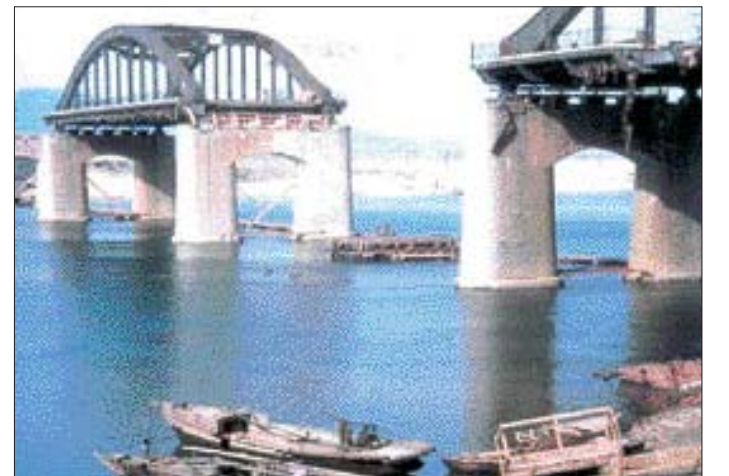
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먹거리 안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형벌이 그대로 유지된다.

행정형벌이 과태료로 바뀌는 예로는 운전자가 도로 통행제한 규정에 위반해 화물을 과적하거나 사업주 등이 그 위반을 지시·요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지만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9만9천명의 전과자가 없어지고 1천22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美중군기자 '한국전 희귀 컬러사진' 공개

한국전 당시 미국 NBC 방송의 중군기자로 3년간 활동했던 존 리치 전 NBC 아시아담당 선임기자가 휴전 55주년에 즈음해 자신이 직접 촬영한 미공개 희귀 컬러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전쟁 당시 서울의 생생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꽂어진 한강 인도교
꽂어진 한강 인도교 모습. 한강 인도교는 지난 1950년 6월 28일 새벽 2시 30분에 수많은 피난민이 남하하던 중 예고 없이 폭파돼 500~800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중앙청 앞 포대 구축
지금도 열린 서울시 종로구 중앙청 건물 앞에 포대 잔지가 구축돼 있고 포가 놓여있다. 중앙청은 지난 1995년 8·15 광복 50주년을 맞아 철거됐다.



군부대 방문 이승만 전 대통령
이승만(오른쪽에서 두 번째) 당시 대통령이 군부대를 방문해 헌복을 입은 어린이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에너지효율인증제도



높은 에너지효율 제품 사용!!

합리적인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
작은 실천 하나가 우리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 ▶ **에너지효율인증제도** : 에너지효율인증제도를 준수하는 제품 구매
- ▶ **에너지효율인증제도** : 에너지효율인증제도를 준수하는 제품 구매
- ▶ **에너지효율인증제도** : 에너지효율인증제도를 준수하는 제품 구매

700 개월로써의 시행/시행
광주대성학원
 광주광역시 광안로1길 11-11

지역 최고의 교육 전문
유한회사 동하실업
 Tel. 010-9946-2211

광주광역시 광안로1길 11-11
에덴병원
 Tel. 010-9946-2211

광주상공회의소